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09
----------	-----

발의연월일 : 2008. 2. 21.

발 의 자 : 심준홍의원 외8인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개발행위허가시 입목본수도를 완화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

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함(안 제6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찬성의원 서명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녹지지역의 경우 40퍼센트 미만인 토지로 한다.

제62조제2항중 “행정부시장이 되며”를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생략) 1. (생략) 가. <u>입목본수도가 30퍼센트 미만인 토지</u> 나. (생략) 2. ~ 3. (생략) ②(생략)	제2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u>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녹지지역의 경우 40퍼센트 미만인 토지로 한다.</u> 나.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구성) ① (생략) ②위원회 위원장은 <u>행정부시장</u> 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 ⑤ (생략)	제6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 ③ ~ ⑤ (현행과 같음)

□ 관제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도시관리계획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도시계획사업	(1) 도시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마. 기반시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바. 그 밖의 사항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할 것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제111조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1.8>

③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어야 한다.

1. 당해 시·도 지방의회의 의원
2. 당해 시·도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별표 1 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과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공익상 필요하여 개발행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입목본수도 및 지표면의 경사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입목본수도가 30퍼센트 미만인 토지

나. 지표면의 경사가 30퍼센트 미만인 토지

2. 당해 행위가 도로·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도법」 제13조, 「하수도법」 제12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제1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사면에 둘러싸여 이용이 불가능한 토지 중 도시경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재해나 환경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32조와 제33조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7. 06. 15 조례 제3510호>

1. 시 의회 의원

2. 시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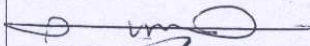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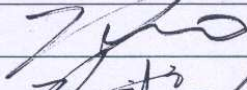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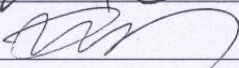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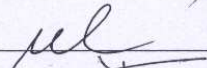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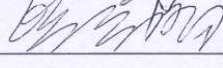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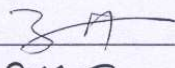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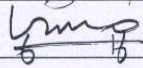
3. 도시계획·토목·건축·교통·환경·방재 및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시 의회 의원 및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전보에 의한 보궐은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찬성 의원서명

의원명	서명	비고
신재홍		
김재경		
김태훈		
김연수		
양승준		
조남욱		
박수빈		
유병세		
송재영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년 2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

I. 심 사 경 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8년 2월 21일 심준홍의원외 8인
2. 회 부 일 자 : 2008년 2월 21일
3. 상 정 일 자 : 제1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8. 2. 28)상정,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심준홍 의원)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개발행위허가시 입목본수도를 완화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 29조).

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함(안 제62조).

Ⅲ.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이환구)

-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 안 제29조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미 시가화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입목본수도 기준을 당초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40퍼센트로 완화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 안 제62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기존에는 행정부시장으로 하였으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금번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완화 적용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병행하여 불법, 무질서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무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